

책머리에

2019년 상반기에 한반도는 다사다난했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의 개최로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비핵화의 여정은 2019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통안보 문제 이외에 새로운 안보 위협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월에 한반도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엄습을 경험했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밖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통안보 못지않게 심각한 안보 문제이다. 최근에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일본발 방사능 위협까지 고려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인한 사면초가 상태이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도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 문제로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이나 최근에 부쩍 늘어난 지진과 산불의 피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구제역과 신종플루의 공포 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문제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어느 한 영역에서만 발생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쉽지만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엔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안보 문제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신흥안보(新興安保, emerging security)의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문제들을 연구해왔다. 그 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던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안보론을 넘어서』(2016)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는 신흥안보 문제들을 이해하는 이론적·경험적 분석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 작업이었던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2017)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된 신흥안보 문제들이 한반도 공간에 접맥되는 메커니즘을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원용하여 드러내고자 했다. 세 번째 작업이었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2017)에서는 신흥안보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사회 변화의 지평 속에서 살펴보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네 번째 작업이었던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2018)에서는 신흥안보의 논의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남북관계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구도에서 펼쳐보았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볼 때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각』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와 대응전략을 다룬 다섯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글로벌 공간’과 ‘한반도 공간’이 만나는 중간지대인 ‘동북아 공간’의 신흥안보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에 ‘동북아’라는 말을 선택하기까지에는 필자들의 고민이 깊었다. 특히 ‘글로벌’과 ‘한반도’의 사이에서 신흥안보 거버넌스를 실천할 ‘지역공간’의 외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필자들을 괴롭혔다. 우리가 신흥안보의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지역공간은 한·중·일의 동북아인가, 동남아시아까지도 포함하는 동아시아인가,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즉, 아태)인가, 동아시아

아와 아태를 포괄하는 동아태인가, 아니면 최근에 논의되는 것처럼 남아시아까지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즉, 인태)인가? 사실 신흥안보 거버넌스를 펼쳐나갈 공간은 각각의 신흥안보 문제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정치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동북아’라는 공간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구성 및 재구성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흥안보’의 이슈 자체들이 지니는 복잡성은 ‘동북아 지역공간’을 중층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룬 이슈들은 단순히 어느 한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위협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위협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 양이 부쩍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위협은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타 영역의 위협 요인들과 복잡다단하게 연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해커들의 장난거리였던 사이버 공격이 금융·통신망이나 원전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을 겨냥할 경우에 심각한 국가안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국 차원의 연료 사용 문제로 시작된 에너지 이슈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의 문제가 되면서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낳는다.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야기한 인구의 이동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에 심각한 사회 갈등의 불씨를 심는다.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자연재해의 문제도 여타 신흥안보 이슈들과 연계될 경우에 더욱 심각한 국가적 재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흥안보 이슈의 성격이 이리도 복잡하다보니 이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룬 동북아의 신흥안보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창발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협력의 거버넌스로 논의되기보다는 여전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협 창발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신흥안보 이슈의 성격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많은 이슈들이 일국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흥안보 위협에 적합한 거버넌스 양식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슈에는 정부가 나서서 전통적인 대응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어떤 이슈에는 민간 또는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떤 이슈에는 지역규범의 형성과 좀 더 근본적인 지역 정체성의 재구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이 지닌 지정학적 특성은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도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 책의 부제인 “복합지정학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담아내기 위한 시도이다.

이 책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담은 아홉 편의 글을 신흥안보의 세 범주, 즉 기술안보, 환경안보, 사회안보로 나누어 다루었다. “제1부 신흥 기술안보의 복합지정학”에는 사이버 안보, 디지털 군사안보, 원자력 발전 안전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1장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국제 협력과 지역규범의 모색”(김상배)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제규범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즉 동아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안보의 거버넌스 모델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특히 세 가지 요소, 즉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의 기술 시스템적 특성, 사이버 공격에 임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복합 네트워크적 특성, 동아태 지역의 고유한 지정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

태 지역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는 현재 적어도 세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동아태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국들이 나서서 사이버 공격의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는 국가들과 합의를 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피해를 보는 국가들 간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책임귀속(attribution)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거나 더 나아가 기존의 오프라인 동맹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여 대응전선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동아태 차원에서 지역 협력의 제도와 규범을 만들자는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층적 협력 모델의 이면에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구도가 겹쳐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여 동북아(특히 일본)와 태평양을 엮으려는 ‘아태 모델’과 동남아가 앞장서며 동북아(특히 중국)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모델’의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장에서 ‘동북아’나 ‘동아시아’ 또는 ‘아태’와 같은 통상적인 지역 개념이 아니라 ‘동아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장 동북아 디지털 군사안보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의 활용과 논쟁”(신성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21세기 산업과 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들 신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안보전략의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자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체계는 전투와 전장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군의 운용에서도 인력, 군수, 훈련, 운영, 유지, 보수의 모든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인명 살상과 관련되면서 근본적인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살상기능을 갖춘 기계가 주도하는 전쟁에서 전쟁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되는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 적절한 인명 살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나아가 기계가 인간을 살상한다는 개념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윤리적·철학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나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민간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자율무기와 전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다자적 논의나 협의는 아직 일천하다. 동북아의 경우에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이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토의나 성찰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21세기 미래 전쟁을 이끌어갈 신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야말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동북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배영자)에서 다룬 이슈는 원자력 발전 안전이다. 원자력 발전의 일상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이 사이버 테러나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와 연계될 때 지정학적이고 거시적인 안보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에서는 원자력 발전 안전이 대표적인 신형안보 이슈임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에 원자력 발전이 밀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 안전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원

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국내 차원의 원자력 발전 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아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원자력 발전 안전에 관한 협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확산된다는 점과 공격과 방어 능력의 비대칭이라는 원자력과 방사능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자연재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결합될 가능성을 강조하는 신흥안보적 복잡지정학의 관점을 결합하여, 현재 원전의 운영과 관리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기구나 국제기구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과 의무를 인정하지 만 기술, 자연, 사회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초국경적 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나 지역기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실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부 신흥 환경안보의 복잡지정학”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협력, 보건안보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4장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정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비교연구”(이태동)는 대기환경의 문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동북아 대기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환경 협력의 구체성은 각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왜 국가들의 분야별 환경 협력의 구체성은 다

른 양상을 보이는가? 제4장에서는 대기환경 협력을 목적과 목표, 주제, 방안의 구체성이라는 틀로 개념화하고 구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환경 문제의 특성과 범위, 대응의 비용과 편익, 국내 여론의 요소가 환경 협력의 구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틀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간의 대기환경 협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 문제의 범위가 넓고 비용이 크며 국내 여론의 지지가 낮은 기후변화 협력에 비해 미세먼지 협력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협력의 구체성 개념을 통해 환경 정치를 이론화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환경 협력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제5장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와 지역 협력”(신범식)에서는 에너지안보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넘어 신흥안보로 에너지안보를 파악하게 된 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그 결과로 야기된 에너지국제정치의 과제들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이런 과제의 설정이 어떤 협력과 경쟁의 에너지국제정치를 전개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적 협력의 시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안보와 경제의 통합적 효과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와 남북 관계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예측해보았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5%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에너지안보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및 도입처를 다변화해야 하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미세먼지와 지진 등 대기오염 및 원전 안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 당장 천연가스(LNG, LPG) 발전이 석탄 발전 및 원전을 대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경제로 넘어가는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의 도입 안정성 위주의 경직적 계약구조를 넘어 유연한 시장을 형성하고 적응해야 하며 동북아 시장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에서 자기 이익과 기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성공하지 못하면 기존의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뒤쳐진 경제를 개발하려는 체제전환국인 북한에도 에너지 문제는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경제-안보 넥서스(nexus)로서의 양가적 속성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남북 양자 간의 과제로만 환원해서는 안 되며 지역적 협력의 틀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틀 속에서 남북 간의 반(半)직접적 연계가 북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온건한 해법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에너지국제정치는 경제와 안보를 선후 및 위계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혼합되어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국제정치는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동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작용하는 혼합 이슈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별 및 지역적 에너지안보의 증진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제6장 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조한승)에서는 질병의 예방, 처치, 대응과 관련된 보건안보 문제를 인간공동체의 유지와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홍안보 개념하에서 보건안보의 위협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식과 행위자도 그에 상응

하게 다양하다. 보건안보는 오랫동안 ‘예방’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나 최근 신종 감염병, 바이오 테러 등 예상치 못한 보건 긴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 필수체계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비’의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보건안보의 도전으로는 신종 감염병, 바이오 안보, 식품 안전성, 비전염성 만성질환 및 고령화 등이 지적된다. 보건 이슈의 특성상 상호 교류가 빈번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는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환, 위기상황에 대한 유기적 대응 및 역할 조율, 공통의 보건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제도화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 한·중·일은 각각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참여, 보건복지 증진, 보건외교 확대 등을 자국의 보건안보정책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의 다자간 보건안보 협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동북아에서 지역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한·중·일 보건안보 대화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둘째, 한·중·일이 비교우위를 가진 첨단기술을 보건안보에 적용하는 공동 투자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셋째, 비전염성 질병 및 고령화 등 공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부 신홍 사회안보의 복합지정학”에는 대규모 재해·재난, 난민안보, 신홍 경제안보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7장 동북아 대규모 재해·재난 거버넌스”(이승주)에서는 재해 및 재난의 빈발과 대규모화가 그 자체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홍안보 이슈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연재난은 양질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보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의 성격이 순수한 재난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신홍안보로서 자연재해의 두 번째 차원은 이슈 연계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자연재해는 환경, 기후변화, 빈곤, 지속 가능한 발전,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는 국가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 차원의 협력은 좁게는 긴급구호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지역 협력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협력을 저해하는 전통적 요인이 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체제의 차이, 역사적 유산 등은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와 같이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군사안보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전형적인 비전통안보 분야의 지역 협력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신홍안보로서 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제8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 격차: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이신화)은 신홍안보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들 국가는 포용적, 방관적, 배타적 난민정책을 채택하는가? 왜 유사한 상황의 인도적 난민 위기에도 상이한 정책을 펴는 ‘대응 격차’(response divide)가 생기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난민 문제를 일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북아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문적·정책적 시도는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8장에서는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논의하고 그동안 개별 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동북아 난민 문제가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 없는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난민 이슈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동북아 신홍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9장 동북아 신홍 경제안보의 국제경쟁과 협력: 인구, 사회통합, 불평등”(이왕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적 리스크이자 신홍안보 이슈로 인구 고령화·노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다루었다. 이러한 위험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반세계화, 반이민,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아직까지 동북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고령화·노령화 문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불평등의 문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10-20년 내에 동북아에서도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 가지 경제적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이나 체제 간의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안보의 관점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포함한 ‘복합 지정학’의 관점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인구, 사회통합, 불평등의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은 물론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여러 차례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진행된 신흥안보 연구 시리즈에 참여해주신 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이번의 다섯 번째 라운드 연구가 태동한 장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이 후원하여 2017년 12월 26~27일에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컨퍼런스였다. 당시에 발표자와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정혜주(고려대), 손열(연세대), 민병원(이화여대), 한인택, 이성우, 도종윤, 기지윤(이상 제주평화연구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당시에 컨퍼런스 준비를 도와준 하가영, 정현아(이상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연구 발족 이후에 2018년 4월에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에 중간발표 모임을 갖고 12월에 이르러 두 차례로 나누어 최종발표회를 개최하는 여정으로 연구를 진척시켜나갔다. 1차 최종발표회는 2019년 12월 7일 한국정치학회 연례대회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는데, 이 책의 제2장(신성호), 제6장(조한승), 제8장(이신화)이 발표되었으며, 김상배와 신범식(이상 서울대)이 참여하여 토론을 펼쳤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황지환(서울시립대), 김현준(고려대) 두 분 교수께 감사한다. 2차 최종발표회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이 후원하여 2018년 12월 14일에 더플라자호텔에서 정책연계 컨퍼런스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서 이 책의 제1장(김상배), 제3장(배영자), 제4장(이태동), 제5장(신범식), 제7장(이승주), 제9

장(이왕휘)이 발표되었다. 당시 사회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마상윤(외교부), 류석진(서강대), 정동준(통일평화연구원), 김성진(한양대), 조동준(서울대), 김소정(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진호(광운대), 박종희(서울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 행사 개최의 계기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인 ‘신흥권력의 부상과 중견국 미래전략’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이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협력연구 지원사업인 일명 ‘신지정학’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이 책이 원용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은 이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로 산출되었다. 이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공동 편집자로 지적여정을 같이해준 신범식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외교부와 정책연계 컨퍼런스의 기회를 만들어준 마상윤 국장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명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신승휴, 최용호, 알리나, 이종진, 김지이, 김화경, 최정훈, 이금강 등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성심껏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사회평론 관계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한다.

2019년 4월 15일

김상배